

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처리”…국힘 비준요구엔 선긋기

한미 양해각서 체결·팩트시트 발표 임박…특별법, 이달부터 소급
외통위 김영배 “MOU는 조약 아니라서 비준보다 특별법으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5일 APEC 정상회담 한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거둔 성과였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든 국의 중심 실용외교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막혀 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를 다시 열었다”면서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새 틀을 만들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이날 구성했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발표 직후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유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기재위 소관으로 발의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청래 대표도 APEC 정상회담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이라고 평가한 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주 최고위원도 이날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미국 조선소들은 현재 핵잠을 건조할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매우 부족해 실제 건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라며 “신속한 건조·운영을 위해선 숙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핵잠을 국내에서 병행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 지속해서 추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해 복구예산 증액·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당정, 예산·법률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눠 편성된 재해복구 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다.

이밖에 당정은 협조를 조정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종욱 민노총 광주본부장, 광주시장 출마

“군공항 이전·행정통합 등 해법 제시”

이종욱 민노총 광주본부장이 5일 진보당 소속으로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정치·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며 “호남의 전성기와 광주의 자존심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광산구청 임용 이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30년간 공직을 지냈고, 공무원노조와 민노총 광주본부장을 역임한 이력으로 자신을 “행정을 아는 시장, 노동을 아는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과 재정위기, 행정통합, 시립의료원,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소각장 등 굵직한 현안을 거론하며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 온 경험으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의 노사 문제와 생산기반 강화에 대



해선 “GGM 노사 갈등을 신속히 풀고 확보된 부지에 제2공장을 추진하겠다. AI와 자동차를 융합해 기아와 함께 ‘100만 대 친환경차 도시’의 기반을 깔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시문화 전략으로는 5·18의 가치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결한 ‘K-민주주의 브랜드’를 내세웠다.

그는 “문화·예술과 건축 관람객이 복작이는 ‘ACC 2.0’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문화 인프라의 기능 재정립을 예고했다. “색다른 정치·행정의 효능감을 140만 시민에게 증명하겠다”며 시청 공직자들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자로 30년 공직을 마무리했으며, “시정의 4500명의 공직자와 손잡고 ‘일하는 시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규백 국방 “원잠, 국내 건조 합당”

“필리조선소, 인력·시설 부재…미국과 새 협정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부연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건

조 시설로 록 집어 언급했다.

하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 핵잠수함을 건조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고 밝힌 뒤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